

【 2015.01.09(금) 건설경제 】

올해 신규 토목공사 대거 쏟아진다

철도 5.8兆 중 5.2兆 물량 상반기에 풀어
수공도 작년보다 7배 늘어난 1.5조 밸주
300억원 이상 도로공사 15건 안팎 될 듯

올해 토목공사 밸주 물량이 전년에 비해 늘고 조기 집행됨에 따라 공공건설시장이 모처럼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특히 철도분야에서 6조원에 가까운 일감이 쏟아져 올해 공공 토목시장을 이끌고, 이어 도로분야도 3조원을 상회하는 신규공사가 선보인다.

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전년에 비해 올해 신규공사 밸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올해 SOC 예산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철도공단은 지난해 약간 웃도는 총 5조8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건설공사를 밸주할 계획으로, 5조2543억원 규모의 신규 노반 건설공사 30건을 모두 상반기에 쏟아내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앞서 올해 밸주계획을 발표한 K-water도 지난해 2265억원(계약 기준)보다 무려 7배가량 늘어난 1조5263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477건을 집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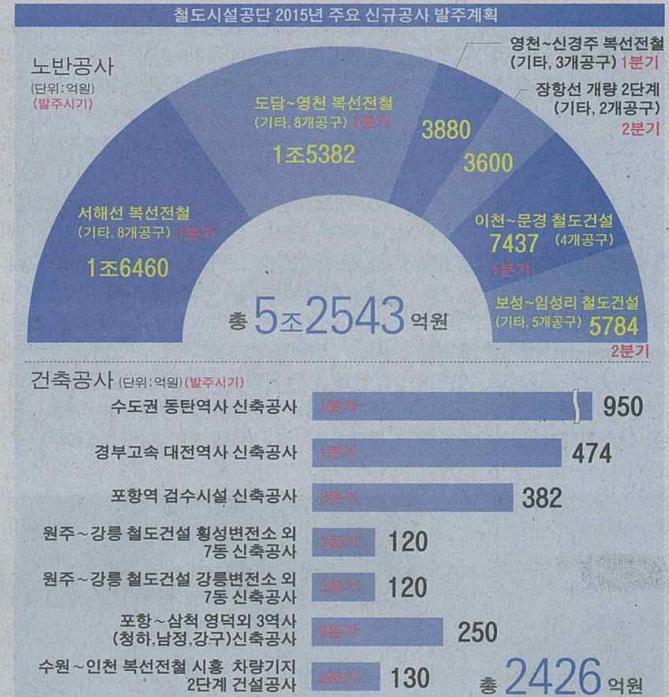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400억원 규모의 420건은 상반기에 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중대형 건설공사 밸주 물량이 1조3307억원에 18건으로, 4대 강살리기 사업 이후 침체된 수자원분야의 일감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음주 올해 밸주계획을 발표할 도공도 지난해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입찰 물량이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5건 안팎으로 크게 늘어난다.

도공은 올해 광주순환고속도로 6개 구구(이하 총사업비 2825억원) 및 포항~영덕 고속도로 4개 구구(1조2240억원), 아산~천안 고속도로 5개 구구(1조 1840억원) 신설과 남이~천안 고속도로 3개 구구 확장(4130억원) 외에 창녕~밀양 고속도로 6개 구구 신설(1조303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선보인다.

도공 관계자는 "아직 올해 밸주물량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 중 75%가량은 올해 신규공사로 밸주할 방침"이라며 "다만 올해 받은 예산이 노선별로 200억원 이하라 입찰공고는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 토목시장을 이끄는 3대 밸주처가 올해 밸주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건설업계도 기대감이 높다.

대형사 관계자는 "4대강살리기 이후 토목공사 밸주가 급감하고, 무더기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과 과징금으로 관련업

계가 힘들어진 시즌을 보냈다"며 "하지만 올해는 공공 토목공사 밸주 확대로 기존 준공현장을 대체할 신규 현장을 확보해 인력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침체된 시장 분위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희찬기자 chc@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무효 조항 신설

공정위, 건설 등 9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원·하도급사 모두 인정해야 '계약변경' 가능해져

표준 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계약변경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할 때만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 9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부당특약의 무효 조항을 마련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특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약의 내용이 표준 하도급계약서와 배치되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을 잃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변경 조건도 수급사업자의 권리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 계약변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계약변경 전 수행한 부분에 대해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사용한 물량에 대해 선별주자로부터 공시비를 증액받지 못하도록 원사업자가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규정도 정

비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어음이나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보증기간을 어음 만기일 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확대해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무효 조항 신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수급사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안전관리비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 해당 기술은 수급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관련 단체에 요청하는 등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의 사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시운전 비용 부담, 원사업자의 기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이정지체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랜드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공정위 홈페이지(www.fic.go.kr)에 게시했다.

박경남기자

【 2015.01.09(금) 건설경제 】

강원도 올해 핵심과제는 '대륙경제 기반 구축'

동서고속철·동해북부선 철도 등 8개 건설사업 추진

〈춘천~속초〉

〈삼척~제진〉

"물오른 통일 논의 전제로 북방경제 선제적 대응"

강원도가 2015년 도정 핵심과제로 '대륙경제 기반 구축'을 꼽았다. 이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맞물려 있어 경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건설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도정 핵심 키워드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문화예술·관광 올림픽'과 함께 대륙경제 기반 구축을 꼽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사업으로는 '육해공 입체적 인프라 확충'이라는 큰 그림 아래 스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여주~원주 철도 건설△동해북부선 철도 건설△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속초항 항만개발△백두산 항로 재개△양양국제공항 활성화△설악산 오색사도 설치 등이 추진된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를 잇는 90.8km의 단선철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2조99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동서고속화철도는 2001년부터 논의돼 왔다. 그때마다 경제성 부족으로 뒷전에 밀렸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재조명받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정부예산에서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용으로 130억원이 계상됐다. 속초, 화천, 양구, 인제 등 지자체들도 역사건설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단 도는 예타 통과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 상반기 예정된 예타

발표에서 통과되면 사업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원주 철도(21.8km)는 총사업비 515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역시 올해 정부예산 130억원이 반영돼 있다. 오는 3월 월곶~관교까지 포함되는 예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도는 월곶~관교의 결과와 상관없이 단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여주~원주가 건설되면

성남~여주~원주~강릉 철도와 연결돼 동시에 간선철도망이 완성된다.

동해북부선은 삼척~제진을 잇는 167.4km의 복선철도로 총사업비는 5조3568억 원으로 추정된다. 아직 초기단계라 같길은 같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핵심 철도망이라고 역설한 만큼,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16~2025)에 반영되도록 상반기

내 계획 수립 착수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반영 시 남북협력 사업(예타 면제)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동해항 3단계와 속초항 항만개발은 해수부 및 기재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획대로 준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해항 3단계(총사업비 1조6895억원)의 경우 삼척시가 제기한 해안침식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착공하고, 하반기에는 방파호안의 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속초항(총사업비 896억원)

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른 할주로 연장도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482억원의 설악산 오색사도 설치사업은 지난해 최종 노선(오색~끌정) 확정에 이어 올해에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된다. 준공시키는 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2017년 12월이다.

도 관계자는 "대륙경제 기반 구축은 물오른 통일 논의를 전제로 북방경제를 능동적·선제적으로 주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활용해 물류·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내포돼 있다"면서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4대강 이후 전반적 공공공사 물량 감소했지만

강원업체, 2년연속 1.4조원대 수주

지난해 수주실적 잠정 집계
평창올림픽 공사입찰 영향
민간 포함 첫 3조 돌파 기대

지난해 강원지역업체들이 공공공사에 서만 1조4000여억원의 수주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공사수주를 포함할 경우 3조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정동기)에 따르면 도내 업체는 2014년 한 해 총 2024건, 1조4286억2962만원의 수주고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3년(1조4666억3459만원)에 이은 2년 연속 1조4000억원대로, 최근 8년간 최대 규모로 3번째에 해당한다. 도내 업체들이 가장 많은 공공실적을 기록한 적은 2010년 1조5459억8286억원이었다.

4대강 이후 전체적으로 공공공사물량

연도별 강원업체 공공공사 수주현황

| 연도 | 건수 | 금액 |
|------|------|----------|
| 2007 | 2423 | 1조2194억원 |
| 2008 | 2057 | 1조133억원 |
| 2009 | 2575 | 1조3646억원 |
| 2010 | 1887 | 1조5459억원 |
| 2011 | 2142 | 1조1376억원 |
| 2012 | 2017 | 1조2710억원 |
| 2013 | 2645 | 1조4666억원 |
| 2014 | 2024 | 1조4286억원 |

이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강원업체들이 2년 연속 1조4000억원대의 공공공사 수주를 기록한 것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공사들이 본격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아이스하키경기장 I·II, 피겨·쇼트경기장 등의 경기장 공사와 군도 12호(유천~수하) 도로확포장 등 진입도로 공사 입찰이 계속됐다.

태백건설산업의 경우 경기장 공사 3곳에 참여해 단숨에 400억원 이상의 수주고

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간 수주액을 포함해 사상 첫 3조원 돌파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2조9811억3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주액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3조원은 돌파하지 못했다. 당시 공공수주액은 1조4666억원이었다.

사실 지난해 공공수주액은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놓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유야무야되고, 하반기 발주가 유력했던 진입도로 건설공사 일부 올해로 이월되면서 실적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강원도회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공사들이 예정대로 발주됐다면 1조 5000억원에도 육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월까지 업체들의 실적신고를 받아봐야겠지만 민간공사가 뒷받침된다면 3조원 돌파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회훈기자 hoony@